# 최운열 前 의원 초청 특강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스크립트

여연 아카데미

저 같은 사람을 부르기가 어려웠을 텐데 지상욱 원장님이 깨어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을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 앞에 특강을 초대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내에 있을 때도 굉장히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파가 서로 싸울 때는 싸우지만 궁극적으로 정치가 추구하는 것은 민생의 후생 증진이 아닌가, 국민이 잘살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딨고 보수, 진보가 어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당 원내 총무실도 방문해서 여당 의총에 야당의 정책통을 불러서 얘기하고, 야당도 여당의 정책통을 불러서 얘기를 서로 들어보면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밖에서 얘기하다 보면 합의점을 찾을 텐데 그 대화가 단절되어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는데, 지 의원이나 저나 이제 21대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경제 3법 관련 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업 규제법이다. 기업을 옥죄는 법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기업을 옥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이는 친기업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이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고,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의 이해 폭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것에 대해 오늘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원론 책을 보면 한 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세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여기서 정부는 국가를 다스리고 또 공직자를 채용하고 공익사업을 합니다. 그럼 원천적으로 정부는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원천은 무엇이냐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개인이 내는 소득세

입니다. 그 외에 부가가치세도 있고 상속 증여세도 있지만 다 크게 보면 이에 포함됩니다. 그럼 개인이 내는 소득세, 그 소득의 원천은 어디냐, 기업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의하는 기업은 1인 미디어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개인들도 기업의 소속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원천이 되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결국 기업이 있어서 직장이 있고 그 직장을 통해서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업을 창업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변형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약무기업이면 시무노동이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이 존재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기업이 없으면 한 나라의 경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의 원인을 진단하고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주요 이해 관계자는 주주, 경영자입니다. 또 생산을 위해서는 근로자도 주요 이해 관계자죠. 또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룰을 셋팅하는 정부, 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 이런 이해관계자 집단이 어우러져서 한 기업이 존재합니다. 기업이 잘되면 이들 중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기업이 잘되면 주주는 배당도 많이 받고 주가도 올라가서 좋은 것이고 경영자나 근로자는 직장이 안정되고 월급이 올라가서 좋습니다. 채권자는 내가 빌려준 돈을 만기에 상환을 받아서 좋은 것이고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부의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품질 좋은 제품을 기업이 만들어줘서 좋은 겁니다. 기업이 잘되어서 피해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친 기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혼동이 생깁니다. 기업의 오너는 누구인가요. 주주 중심의 경영학에서는 이제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들어보면, 70%가 대주주 경영자를 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언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오너한테 불편한 건 반기업인 겁니다. 기업이 잘 되면 오너는 잘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너한테 좋은 것이 반드시 기업에 좋다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오너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정몽구 회장님은 주식 보유가 가장 많은 대주주일 뿐이지, 오너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3법도 야당 의원님들이나 기업이나 보수언론에서는 왜 반기업이라고 하냐. 오너한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르잖아요. 기업이 잘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대주주 경영자한테 좋은 것이 반드시 기업한테 좋은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대주주 경영자가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인식의 차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대주주 오너와 기업을 동일시 하기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형태는 재벌이라는 특이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순기능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형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당 GDP가 3만 불이 되었고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큰 배경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재벌 경영의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기업과 대주주를 동일시하다 보니 규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규제를 풀면, 기업이 잘되면 오너만 잘 먹고 잘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규제를 푸는 것에 미온적입니다. 이쪽은 기업에 좋은데 오너한테 불편한 것은 반기업이라고 반대하면서 지금 경제 3법을 반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생각이 공유한다면, 정말로 경제 3법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우리 언론의 태도를 한 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그게 정상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오직 딸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마음대로 폭언하고 그것이 대한항공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줍니까. 그러니까 '조현아'를 수사하니까 머니투데이라는 언론에서 어떻게 전하느냐, "조현아 사태가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킬까 걱정된다."라고 합니다. 조현아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왜 반기업입니까. 다르잖아요. 그런 경영행태는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왜 반기업입니까. 기업과 기업인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상욱 의원님과 저희가 인터넷뱅크법 통과시킬 때도 어려웠지만 개정안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심해서 어려웠습니다.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그 당시에 황창규 회장을 통해서 운영진들이 어떤 로비를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떻든지 간에 케이뱅크가 인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K뱅크는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은행으로 커야 합니다. 처음에 제정된 법에 의하면 케이뱅크가 증자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모레 죽

게 되어있어요. 빨리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데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는 죽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로비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인가받은 기업을 왜 앞으로 증자를 시켜서 더 크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아니 케이뱅크가 잘되면 고용도 늘어나고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세금도 많이 내서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잖아요. 케이뱅크는 더 잘 되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황창규 회장이나 그 당시의 경영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사람들이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케이뱅크에 페널티를 줍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기업과 기업인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데에서 오는 혼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 그림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이 평평해야 제대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경제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측면의 기울어진 운동장.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언론에서는 기회만 되면 기업에 투자만 하면 경제가 다 되고 고용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법인세를 낮춰라.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업들이 안 하든 못 하든 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은 넘쳐납니다.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이 1200억이고, 금리는 단군 이래 최저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금리가 높습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왜 안 팔립니까. 소득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예로, 250만 원 정도 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750만 명 정도 됩니다. 250만 원 받아서 무슨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내수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가 활성화될 수가 없죠. 그런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 기업에 투자 조금 쉽게 할 수 있게 해줘라. (투자를) 해도 안 됩니다. 만들어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울어진 운동장. 이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 다른 하나가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양적으로 세계가 우러러볼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GDP 규모 세계 10위권, 외환 보유국 8위, 수출 규모 수입 규모, 거의 5, 6위

정말로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3050클럽[1]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한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이 정도로 성장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없이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양적인 지표는 이렇게 우수한데 이제 질적인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쟁수준, 141개국 중에 93위. 노동시장 고용 102등, 노동현장 130등. 근로자의 권리 양대 노총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2천만 근로자로 보면 세계 93위, 임금 유연성 84위. 이런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지배구조, 재무제표의 신뢰성 여기서는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3년 전에 조사한 바로는 한국 기업정보가 믿을만하냐, 66개국 중에 66위 세계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적으로 지정감사제를 도입했습니다. 6년은 자유롭게 감사하게 하고 나머지 3년은 정부가 지정해서 감사해라.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더니 이 순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37위. 이사회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냐 106위. 이게 지배구조의 후진성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하고 있냐 99위. 이런 지표를 가지고 한국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겠습니까? 정부의 후진성. 정부 규제 기업부담 정도 87위, 정부 정책의 안전성 76위, 이런 질적인 지표가 최소한 20위권 정도로 올라야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지, 몸은 비대해져 있는데 속은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에 고지혈증 다 걸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이번의 경제 3법입니다. 그게 왜 기업규제, 기업을 옥죄는 것이겠습니까? 코로나19가 터졌다고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의 부분이 공정경제법 제정 필요성입니다. 왜 우리가 노동 개혁을 해야 하느냐? 노동 개혁 시급합니다. 이 개혁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상법이고, 공공부문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질적인 지표가 양적인 지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이런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한계에 와있습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 성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답답하기도 해서 양 원내대표실을 방문해서 제안했습니다. 제

1) 인당 GDP 3만 불,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가 보기에는 이러한 질적 지표의 개선 없이는 경제 성장이 어려우니,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야당이 좀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민주당이 규제 혁파에 미온적이지만, 양당 정치 세력이 딜을 하자 규제 빅딜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수용을 하고 민주당은 과감하게 규제 혁파를 하자. 이래야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한다. 이게 이제 제가 제창을 한 규제의 빅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국민의힘 집권 시절인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취임하자마자 정부안으로 상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느 날 5대 재벌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 다음에 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법이 아니라 이미 8년 전에 나온 법입니다. 이게 기업을 옥죄는 법이고 기업규제법인지 혹은 친 기업법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필요한 이유로 일부 경제단체에서 경영권 보호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확실한 경영권 보호는 뭐겠어요. 경영을 잘하면 됩니다. 경영을 잘하면, 설령 외국의 헤지펀드가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국내 투자자나 국내기관투자자가 기존 경영진을 지원하지 왜 헤지펀드를 지원하겠어요. 경영을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 헤지펀드가 공격 대상을 찾을 때의 기준이 뭐냐. 이 기업은 전망도 좋고 제품도 내용도 좋은데 현재 경영을 잘못하는 기업, 그런 기업이 주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경영만 잘하면 원천적으로 헤지펀드의 공격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영을 잘못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장치를 한 기업과 경영을 잘하기보다는 경영권이 영원히 보장된 기업이 있을 때 어느 기업이 더 강하겠어요. 후자겠어요?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경영권을 위협받는 장치가 있을 때 기업이 더 경영을 잘하지 개판을 쳐도 경영권이 유지가 된다. 그런 기업은 경영 잘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경영이 잘되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다중대표소송제. 이건 내용을 아시죠. 모자 관계의 기업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자회사의 임원. 임원의 상법상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거 안 하

면 처벌을 받습니다. 자회사의 임원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다중대표소송제입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기면, 그 이긴 사람한테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경영을 잘못해서 피해를 본 그 기업에 속하는 겁니다. 외국의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한국의 경영권을 다 공격한다. 지금 언론이 그러잖아요? 외국의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다중대표소송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 뺏기고 비용 들여서 하는데, 이겨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런 장치를 해놓으면 자회사의 임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하자는 거죠. 소송을 이겨서 그 기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거야말로 친기업이지 왜 이게 반기업인가요? 전자투표제. 주총이라는 것은 기업이 1년 동안 경영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놓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의 장이 주총입니다. 잘한 임원은 연임도 해주고 보너스도 주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질타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은 기본적으로 주총장에 주주가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 주총꾼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주총 저 주총 다니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이득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주주들이 주총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총이 3월 말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왜그러겠어요? 주주 못오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뽑는데 성원이 안 돼서 감사를 못 뽑는다고 또 불평을 하잖아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총장에 주주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다 전산화 되어 있고 다 우리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주총 안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찬반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투표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주가 주총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감사위원 분리. 이게 지금 제일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현 경영진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영을 잘했냐 묻는 것이 감사의 주요 기능이잖아요? 그럼 감사는 원천적으로 현 경영진과 독립된 입장에서 봐야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치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코스닥 위원장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느 코스닥 기업의 경우에 남편분이 기업의 회장님이시고 사모님이 감사예요. 그 기업이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특이한 형태가 있잖아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를 할 때는 3프로 이상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3

프로 제한 룰'입니다. 이게 지금 나타난 룰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2년에 우리나라 상법이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에 3프로 룰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 당시에는 단순 3프로, 개인별로 3프로 계산했는데, 97년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IMF에서 우리에게 요구 한 것이, 한국에 재벌이라는 가족기업이 많잖아요. 남편 부인 아들 할아버지 해서 지분이 분산되어있잖아요. 개인별로 하니까 3프로 다 되잖아요. 그런 기업의 역사가 있어서 합산해서 3프로를 해라. 그게 1997년에 증권거래법에 들어온 겁니다. 원래는 1962년에 상법에 제정된 룰입니다. 지금 금융기업 공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게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하려는 것은 일반 제조회사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감사위원을 한 명 이상을 분리해서 선출하고 선출할 때 지분율을 3프로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영자와 독립된 감사를 하려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경영을 제대로 하면 누가 감사를 하든 뭐가 걱정입니까. 왜 걱정을 하냐면, 누가 들여다 볼까봐 걱정입니다. 구린내 나게 경영을 하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영을 했다면 왜 감사를 무서워하겠어요. 세 명 중 한 명을 분리선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규모 2조 이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이 회사들 평균 이사수가 7명. 그중에 한 명을 분리해서 선출하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이건 안 되겠다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중복 과잉이나 무리한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의 위원장으로 계실 때, 그분이 대표발의를 한 법입니다. 민주당 전체 의원이 참여했는데 20대에 논의도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현재는 통과될 분위기가 높지만. 거기에는 집중투표제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정부 법안은 집중투표제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약화된 법입니다. 상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법입니다.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 느끼는 것 정경유착의 폐해. 왜 한국에서 정경유착이 없어지지 않냐면 기업에 약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많아서 청와대에서 부르면 안 갈 수 없고. 돈을 달라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면 이런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정경유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독립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공정거래법. 내용은 여러 가지 많지만, 핵심은 전속고발법 폐지입니다. 1982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왜 100여 개가 넘는 피해를 본 당사자가 보고하지 않고 정부가 보고하기로 했을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은 보고할 대상이 안 됩니다. 법이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역추적을 해보니 1980년대 초반에 우리 중소기업은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하청관계에서 생사여탈권이 대기업에게 있었습니다. 고발을 하면 그 기업은 죽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신 고발해주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전속고발권의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 권력이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편향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이상 간부들이 그만두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대형 로펌과 대기업에 가 있습니다. 저하고 지 의원이 국회에 있을 때 지의원이 굉장히 좋은 팩트를 찾아냈습니다.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 중 공정거래위 출신이 공정거래위를 1년에 몇 번 방문했느냐, 제 기억에 178번입니다. 뭐하러 방문했겠어요. 2015년인가 공정위가 과징금을 처음에 3조 5천억을 물렸습니다. 최종 결정이 얼마나 났겠어요? 3500억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대형 로펌에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 찾아와서 뭘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불공정 거래가 발견되어도 고발을 안 해줍니다. 4년 반 지난 다음에 고발하면 6개월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납니다.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래서는 중소기업이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당사자가 고발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전속고발법 폐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의 또 하나의 문제는, 1980년대에 제정되다 보니 모든 경제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못 된 문제입니다. 과징금으로 끝나도 될 사항까지 모두 형사상 처벌을 주기 때문에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은 전속고발법 폐지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법은 경상 담합만 전속고발법 폐지로 대폭 후퇴한 상황입니다. 전속고발법이 폐지되면 기업들의 걱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소 우려, 두 번째는 우리 검찰의 나쁜 행태, 별건 수사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면 다른 것으로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업이 견딜 수가 없죠. 첫 번째 남소, 법이 있으면 지키면 되는데 법을 지키고 왜 남소를 걱정합니까. 질문 자체가 안됩니다. 두 번째 별건수사, 이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할 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차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 별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시행

령이나 규칙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이번에 경제 3법 내용 중 하나가 금융 통화 감독법입니다. 민주당이나 시민사회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금산분리입니다. 84년도 금산분리가 처음 도입될 때,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중이었습니다. 돈이 늘 모자라던 상황입니다. 자기 계열사에 사금고가 돈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 이상 지분을 갖지 못하게 했던 것이 금산분리. 30년,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돈의 over supply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신용도가 우리나라 정부의 신용도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발행보다 낮은 금리로 할 수 있는데 왜 은행에서 돈 빌립니까? 생각이 80년대에 머물러 있으니 금산분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은행법 통과될 때도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선진국은 이렇게 법으로 막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금융은 공익성이 많습니다. 금융이 문제가 생기면 다수의 국민이 피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건전성 규제를 높게해야 합니다. 금융통화 감독법의 내용은. 만약에 제조업 회사가 금융업을 하고 싶으면 금융업의 높은 건전성 규제를 받아라. 선진적인 감독체계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이 경제 3법입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특징은 추격형 경제입니다. 미국이 잘하는 것을 일본이 받았고 일본이 잘하던 것을 우리가 취해서 30~40년을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는 중이죠. 추격형 경제는 한계에 와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잘 이용하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규제체계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법이 열거주의법입니다. 법에 쓰여 있지 않으면 못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기술이 내일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열거주의로 담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규제체계를 포괄주의로 가야합니다. 민주당, 시민사회단체는 열거주의

법을 선호합니다. 사고가 나면 일주일 후에 법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은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을 붙이자고 하는데, 이는 기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규제는 포괄주의로 가자고 합니다. 방향 제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부담된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타협하면 되느냐? 기본적으로 포괄주의 규제체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붙이는 것이 답입니다. 기업에 한없는 자유를 주되 무한책임을 주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그 기업이 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기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형태로 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될 것입니다.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산분리 조항에 얽매여 못하게 합니다. 재작년에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M&A한 것이 10조가 넘습니다. 만약 삼성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활용해서 한국 내에서 인수한다면, 한국의 벤처기업들, 우수한 기업들을 여기서 인수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일 망가진 것이 ‘supply chain’이 망가진 것입니다. 국제 공급체인.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리쇼어링’. 지금 나가 있는 기업들이 물류 이동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돼서 셧다운 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리쇼어링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도권 원주 등에 넓은 산업단지가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기능을 행사 못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회에 수도권 규제도 전향적으로 풀어서 외부에 나가 있는 기업이 수도권에 들어와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부산이나 광주로 가라고 하니까 안 들어옵니다. 수도권 리쇼어링 필요합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 것은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높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이 1/4분기 2/4분기 적자를 낼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놀라울 정도의

흑자를 냈습니다. 수출 물량 때문에 흑자가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그런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유지될 거냐. 자신 없습니다. 이를 메꿔줄 수 있는 것이 서비스업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의료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주대 의대가 서울공대 컷트라인보다 높습니다. 비정상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 있음. 그 사람들도 국가 경쟁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기술이 뛰어납니다. 이 둘을 합한 것이 원격의료 기술입니다. 우리 원격의료기술이 조금만 더 보편화 됐더라면 코로나19때 우리나라가 대박을 터트렸을 것입니다. 중국, 일본 다 우리가 환자 유치해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만 10년째 계속 중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주창하다 민주당에서 많이 얻어맞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입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면 국민도 동의할 것입니다.
혁신 창업 활력 제고, 4차산업을 위한 법제화, 차등의결권. 국민의힘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보통 기업에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 우리 입장에서 재벌이라는 형태 때문에 시기상조입니다. 벤처 창업 기업에 한해서라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뒷받침을 잘 해주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잘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개혁도 미룰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용어의 혼선이 있음. 많은 사람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친 노동정부라고 비난합니다. 자본이 위에 있고 노동이 홀대된 면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이 존중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친노동과 친노조는 다릅니다. 양대 노총에 가입한 사람이 200만명이 안됩니다. 전체 근로자의 10% 이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전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노동법은 1953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노동자가 nine to six로 일했고, 이에 맞춘 노동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용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재택근무도 일반화되고, 코로나19가 끝나도 재택근무는 일반화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9-6의 일반화된 노동법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을 바꿔야합니다.
최저임금 문제. 서울의 최저생계비와 도서 지역 최저생계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별 차등화를 두는 게 맞습니다. 왜 전국을 똑같이 해야 하나? 기업 규

모, 업종별로도 차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같이 이야기해야 할 것이 EIT제도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이는 가구당입니다. 4명이 벌어온 것이 최저생계비가 안 되면 차액을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의 생계권이 보장됩니다. 지금 EIT 예산이 6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했더라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피해 주지 않고도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도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 올리면 살아남을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쓴소리할 때,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망하든지, 사람을 줄이든지, 아니면 가격으로 전가하든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없어진 일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직무분석이 잘 되어 있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누구 월급이 더 많아야 할까요? 같은 일을 할 때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 시장경제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규직은 월급도 많이 받고 직장도 보장받고, 비정규직은 월급도 250 만원 받고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회사 사장이라도 인력이 필요하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겠습니다. 월급 적게 주고 쉽게 해고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공정임금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일 노동을 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120% 정도로 책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증권 산업에서는 이미 정착된 임금 체계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에서도 이미 정착된 체계입니다. 앞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구분의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정규직은 좋은 직장, 비정규직은 나쁜 직장,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인 기업이 보편화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요와 공급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잉여금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 3년 이상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좀비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업은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돈과 인력이 묶여있을수록 이 나라 경제는 활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뭔가요? 사람 자르는 인력 구조조정입니다. 이 시기에 인력 구조조정만이 답은 아닙니다.
P * Q ≤ S(r) 제가 개발한 모형입니다. 어느 기업이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출하는 비율이, 이 부등호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S(매출)가 감소했습니다. 이 부등호가 성립하려면, P(임금수준)와 Q(임직원수) 둘 중 하나는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P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P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으로 가야 합니다. 4년 전에 대우해양조선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거제로 직접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대담을 하고, 마지막으로 노조위원장께 대단히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미 산업은행에서는 30% 인력 구조조정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회사는 살아야 할 것이고 산은은 30프로 인원 감축한다고 하고 있다. 여러분은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답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건비를 30% 줄이는 것이 답이다. 할 수 있겠느냐.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노조위원장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현장에 뛰어들어서 대화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노동개혁을 뭐라고 반대하냐면, 쉬운 해고 이것만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노사정이 숫자를 놓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다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방법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제. 이 법에는 저도 책임이 많습니다. 도입될 때 이론적인 배경을 많이 적용했습니다. 저는 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어떻게 만드느냐?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해서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자리입니다. 또, 노동 관행만 바꾸어도 일자리가 생깁니다. job sharing.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기본 가정은 현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든지 최소한 유지되는 것입니다. 28%를 더 고용해야 기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기존 근로자들이 조금 피해를 봅니다. 초과 수당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50% 초과 수당을 준다고 해도, 16%의 인원이 추가되어야 기업이 유지가 됩니다. 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밀어붙였는데,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지면서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죠. 가정이 깨졌으니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이 어그러졌는데 밀어붙이면 부작용만 생깁니다. 52시간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정개혁. 20대 국회에 있을 때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문제는 언제의 문제이지 반드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세정개혁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업은 국제경쟁을 해야합니다. 지금 우리 법인세 수준이 국제경쟁을 할 만한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소득세. 8800만 원에 대해서 36%의 세율입니다. 이게 언제 결정되었느냐? 1994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8800만 원은 매우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36% 해도 되는 것이죠. 지금은 현대자동차 평균임금이 9500만 원입니다. 8800만 원 정도는 중위소득보다 조금 높은 것입니다. 오히려 세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더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또 우리 근로소득자의 3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100만 원 월급에 세금 내게 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에서 1원을 내면 2원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은 내게 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정을 개혁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 너무 높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아들에게 가업을 넘겨주려면 65% 세금을 내야합니다. 너무 징벌적인 과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증여 상속세가 3조 남짓밖에 안 됩니다. 대단한 금액도 아닙니다. 현실화해서 15%로 대폭 낮추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세원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전체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세. 요즘 논란이 많죠. 저는 1가구 1주택은 거의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2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거를 가지고 재산증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더 과감하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풀어주고, 경기가 좋아지면 죄고. 냉탕 온탕 하다가 지난 30~40년 동안 이 악순환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주거를 경기조절수단으로 사용할 유혹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주택부든 주택처든 만들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거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주거문제를 다루면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출 측면의 문제. 지금 복지지출 문제 많습니다. 주변에도 이중, 삼중으로 지출된 복지지출이 많습니다. 부처별로 복지지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화한다면 많은 세출이 줄어들 것입니다. 저의 계산으로는 제대로 구조조정만 해도 전체 세출의 10%는 아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어지간한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야가 맞대서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